
공급망안정화

전주기 금융지원 방향

2025. 8. 20.

관계부처합동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전주기 지원 필요성 및 중점 지원분야...	2
III. 소주기 금융지원 방향	3
1. Up-stream(탐사, 확보, 도입, R&D, 기술)	3
2. Mid-stream(운송, 유통)	5
3. Down-stream(가공, 생산, 수요처 확보)	6
IV. 향후 계획	8

I. 추진 배경

- **[검토배경]**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응 필요
 - 자국 중심 통상환경 변화, 희토류 등 수출통제, 우크라이나 전쟁, 중동사태 등 대외여건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
 - 글로벌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 → 전쟁, 자연재해 등 비경제적·지역적 요인이 전 세계적 파급력을 발휘

- **[최근 동향]** 핵심 공급망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
 - 전기차 캐즘,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 경쟁력이 감소하며 주요기업 상당수가 적자로 전환
 - * 양극재 기업 3사 영업이익(억원): ('22)8,129 ('23)△304 ('24)△5,921 ('25.1/4)△1,208
 - 석유화학·철강산업 등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나,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성장 한계에 직면
 - 중동사태, 주요국 해운 관련 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인한 물류망 등 공급망 전반의 불안이 지속

- **[해외사례]** 주요국은 자국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해 경쟁적 지원 중
 - 경제안보 확보 수단으로 첨단산업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 강화

구분	관련법령/정책	지원내용
미국	반도체 지원법(Chips Act)	- 반도체 제조시설, 연구개발 투자 등에 총 527억달러 보조금 및 최대 25% 세액공제
	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	-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시 1kWh당 35불 세액공제
일본	AI·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워크	- 반도체 소재 및 AI 분야에 '30년까지 10조엔 규모 보조금 지원, 50조엔 이상 민관투자 유도
EU	핵심원자재법(CRMA)	- 핵심 원자재 채굴·정제·재활용에 보조금 지원
	반도체법(EU Chips Act)	- 반도체 산업에 430억유로 규모 민관투자 촉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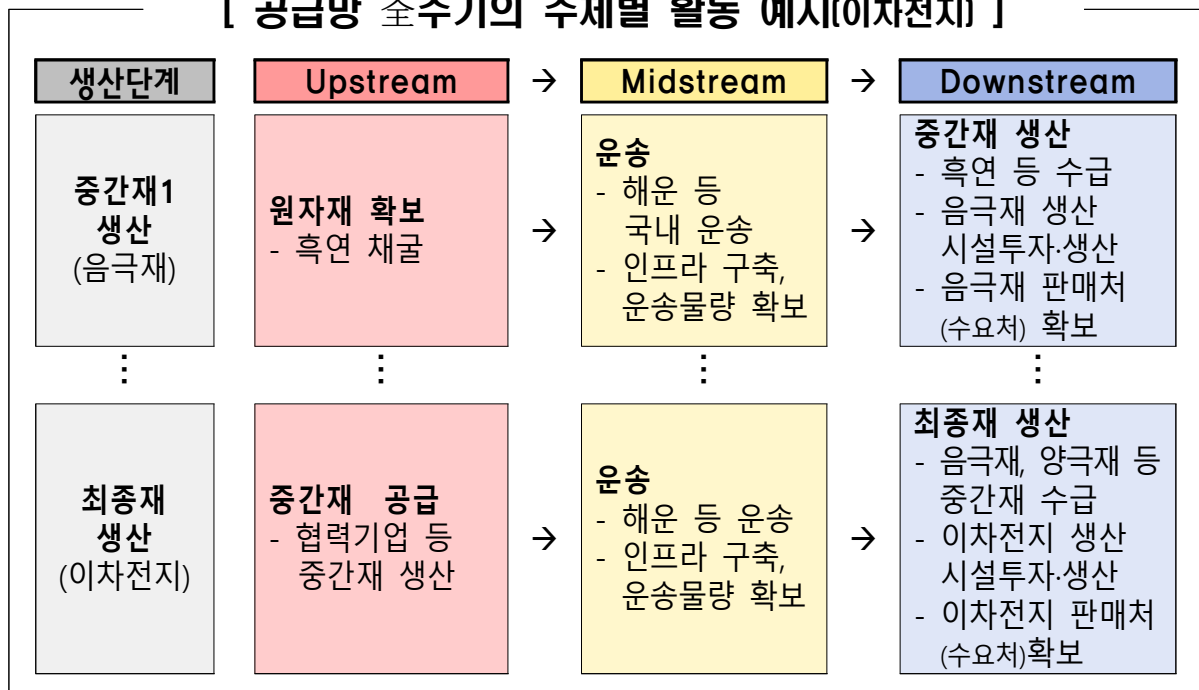
Ⅱ. 전주기 지원 필요성 및 중점 지원분야

- **[공급망 특성]** 공급망은 특성상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
 - 공급망은 원자재 확보 - 유통 - 중간재 가공 - 최종재 생산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층적 구조로 연결
 - 공급망 전체의 회복탄력성은 '가장 약한 고리'의 강도에 좌우

⇒ 공급망 내 취약지점(병목지점) 최소화, 개별 공급망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, 공급망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 필요

- **[지원분야]**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및 공급망 파급력이 큰 분야를 우선적 전주기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
 - 핵심 전략산업 및 국민생활 밀접분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이 큰 공급망 핵심분야
 - * 이차전지, 반도체, 핵심광물, 에너지, 국민경제필수재, 제약·바이오, 물류·인프라
 - 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(석유화학, 철강 등)으로 국내 공급망 분절 방지를 위한 선제적 산업구조 개편 필요분야

[공급망 소주기의 주체별 활동 예시(이차전지)]



Ⅲ. 초주기 금융지원 방향

1 Upstream(탐사, 확보, 도입, R&D, 기술)

- ◇ 자원확보는 고위험, 정보부족 등 요인으로 민간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, 기술개발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
⇒ 개발협력 연계, 공공부문의 리스크 분담 등을 추진하고, 공급망 부문 기술개발 지원 위한 제도개선 병행

① 핵심광물·원자재 등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지원 확대

- 핵심광물투자협의회* 활성화를 통해 유망 자원개발사업을 발굴하고, 대출·투자·보증 등 필요자금 패키지** 지원
 - * 기재산업외교부, 광해공단, 지질연, 에너지공단, 해외자원산업협회, 무보, 수은 등 참여
 - ** 투자(공급망기금) + 대출(에너지공단, 수은 등) + 보증(무역보험)
-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급망기금에서 5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, 성공불 용자* 확대 등으로 연계 지원
 - * 당해연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비의 최대 50%를 용자, 개발 실패시 용자원리금의 최대 80%를 감면(에너지공단 해외자원개발 용자 사업 '25년 390억원)
-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*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 자원개발 탐사 단계 리스크 완화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
 - *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에 필요한 비용·기술·정보 등 지원(광해광업공단)
- 핵심광물 민관 공동투자시 투자기간 경과로 공급망기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투자원금만 회수하도록 풋옵션조건 완화
 - * (현행) 투자기간 경과시 투자원금 + 최소한의 수익 회수 조건 → (변경안) 투자원금 회수
-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분·펀드 투자기능 활성화(투자 목표액 '25년 500억원, '26년 1,000억원)

② 개발협력과 금융수단 간 연계 지원

- 자원개발 등 공급망 관련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기타 정책 금융과 연계하는 등 정책 시너지 효과를 제고
 - * (예) 자원개발 정책 수립 자문(KSP, KOICA) + 인프라건설(EDCF) + 광물자원 개발(공급망기금) + 정·제련, 가공공장 구축(수출금융 등 정책금융)

- 다자개발은행(MDB)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강화

* (예) ADB의 핵심광물·청정에너지 관련 기술협력사업 : ADB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핵심광물 등 기술 관련 정책 자문 및 네트워크 지원('24.4월~)

3 공급망 관련 초기 Start-up에 대한 지원 강화

- 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급망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(공급망법 개정)

* 공급망기금의 투자대상(공급망법 제 41조 제2항) : (현행) 집합투자기구^{크투법}
→ (개정안 예시) 벤처투자조합^{벤처투자법} 신기술투자조합^{여신전문금융업법} 등 포함

- 공급망안정화기금, 모태펀드 공동 출자를 통해 중소·벤처기업 대상 공급망 안정화 펀드(가칭 공급망안정화 벤처펀드) 조성 검토

4 공공부문의 인내자본 역할 확대 위한 제도개선

- 공급망기금의 중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지원 역할을 뒷받침 하기 위해 조성기간 연장(現 5년, 공급망법 개정)

- 핵심광물 투자, 해운인프라 건설 등 장기간 소요 사업 지원을 위해 공급망기금의 투자·대출기간 연장(現 10년 → 20년)

5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관련 기술 자립화 지원

- 주력산업 핵심기술 획득위한 기업인수·라이선스 구매, 수입 대체 기술개발 등 사업에 대해 공급망기금을 통해 저리지원

- 폐자원 內 유용자원 회수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재자원화 전주기(전처리-분리-정제-회수-분석 등) 핵심 기술개발 과제 발굴·지원

- 대외의존도와 수급리스크가 큰 핵심광물 중 유망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공급망기금을 통해 직접투자·대출 등 지원

2 Mid-stream(운송, 유통)

◇ 통상환경 변화,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→ **물류망***의 **전략적 중요성**이 부각

* 해운물류는 전략물자 대부분을 수송하며,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.7% 이상을 담당

⇒ **인프라 구축, 운송여력 확보** 등 선제적 대비 필요

1 운송·유통 전반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폭 확대

- 기존 품목중심의 지원대상을 경제안보서비스까지 확대하며, 1등급 경제안보품목·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 지원
- 해운물류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망기금 지원 대상을 국내 MRO* 제공 조선사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
 - * 유지-보수-관리(Maintenance-Repair-Operation)
- 항공물류 재편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조속한 안정 지원

2 물류망 취약성에 대응하여 항만 물류센터 등 인프라 조성

- 해운물류 정책연계 펀드* 등을 활용하여 해외 거점별 물류 인프라 지속 확충(해외 공동물류센터 '25년 6개소 → '32년 40개소)
 - *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 펀드(1조원), 항만터미널 스마트화 펀드(5,000억원) 등
- 글로벌 거점항만의 터미널 지분·운영권 등 확보 위한 해외 터미널 투자 민관 T/F 구성, 공공자금 지원 등 추진
-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후단지 지속 확대('22년 16백만 → '30년 31백만㎡)

3 선박 확충 자금공급 등으로 운송여력 확보

-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신조 할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패키지화 하여 연계 제공
 - * 선박금융(투자·보증) + 친환경 펀드(정책금융기관) + 저탄소선박 지원(보조) 등
- 중소선사 대상 신조, 중고선 확보 등에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

3

Down-stream(가공, 생산, 수요처 확보)

- ◇ **핵심부품 수급이 특정국에 집중***되어 있는 등 **구조적 취약성 지속 + 전방산업 일시적 수요둔화****로 인한 어려움 가중

* 중수입의존도('24년 %) : (희토류 영구자석) 89.9 (천연흑연^{이차전지}) 97.6 (무수불산^{반도체}) 76.9

** 이차전지는 전기차 캐즘으로 수요감소 상태이나,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등으로 회복 전망

⇒ **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** 위한 수급처 다변화, 기업 생산 유인 유지를 위한 **정책적 수요 견인**과 **생산지원** 등을 병행할 필요

1]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 위한 수급다변화 지원

- 특정국 고의존 리스크 분산을 위해 대체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는 등 수입 다변화 위한 지원 강화

* 차량용 요소 등의 수입 단가 차액 지원중('25년 44억원), 중동·유럽산 등으로 수입처 추가 다변화시 지원을 상향

- 중소·중견기업의 수입처 다변화 지원을 위해 대체수입처를 발굴하고, 새로운 수입처 원료를 활용한 제품 생산을 지원*

* 원료 스펙검증, 샘플구매, 시험인증, 시제품 생산 등 연계지원

- 희소광물 정제시설 등 국내 공급망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생산시설 등에 대해 공급망기금을 활용하여 투자·대출 등 지원

2] 생산 단가차액 보조 등 국내 생산여건 조성 지원

-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

- 대규모 생산시설 건설 등 사업의 경우 공급망 정책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여 리스크를 분담하고 민간 참여부담을 완화

- 경제안보품목 및 첨단기술 관련 해외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설립을 촉진*하고 공급망기금 등을 통해 자금 연계 지원

* 국내 투자 컨설팅, 행정지원, 고충처리 등 원스톱 지원

③ 기업의 생산유인 유지 위한 정책적 수요견인 지원

- 국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주요품목의 수요 증가를 위해 국산품 조달기업의 구매·운영자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저리제공
- 에너지저장장치(ESS)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수요처를 창출
- 장기보관이 어려운 품목 등에 대한 민간기업 타소비축을 지원 (‘25년 9억원)하고, 사업자에게 추가 인센티브(보관료 추가지원) 제공
 - * 정부가 품목 구매 후 기업 창고에 보관, 기업은 보관관리 및 재고순환하는 방식
- 주요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국내 생산분,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우선구매 추진

④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위한 중소·중견기업 육성

- 중소·중견기업 등에 대한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폭 강화
 - 중소·중견기업 선도사업자의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기업 신용도를 고려하여 국고채 수준에 준하는 초저리자금 공급
- 공급망기금 내 ‘공급망 금융 통합지원 데스크’를 통해 공급망 정책기관협의회*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지원
 - * 수은, 산은, 기은, 신보, 기보, 무보, 중진공, 해진공, 코트라, 광해공단 등 10개기관 참여
 - ‘공급망 유망기업’ 정보를 공유하여 성장 연계를 유도
- 여신한도가 부족한 중소·영세기업에 대해 저리자금 제공후 후속 보증·보험을 적극 연계
 - * 공급망기금과 연계, 신·기보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 운영(‘25년 최대 2천억원)

5.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 제약요인 해소

- 공급망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출입 은행의 공급망기금에 대한 출연 허용
 - * 수은법·공급망법 개정안 既발의('25.4.16, 신영대·이종욱의원)
-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공급망 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
 - *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 既발의('25.1.20, 김상훈의원)

6. 공급망안정화를 위해 '25년 50조원 규모로 정책금융 지원

- '25년 공급망안정화 위해 45.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저리공급
 - *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, 수은 13.3조원, 산은 18조원, 기은 4.5조원
-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무역보험 등의 보증·보험 제공시 4.4조원 한도 內 공급망 대상기업 보증료율 등 우대제공
 - * 신용보증기금 1조원, 기술보증기금 0.4조원, 무역보험 3조원
- 민관합동 공급망안정화펀드(1.8조원*), 글로벌 공급망 대응펀드(6,000억원**) 활용, 공급망 분야 중소기업 등에 집중 투자
 - * 공급망기금 1,000억원, 수은 1,000억원, 민간 16,337억원 → 선도사업자 등 투자
 - ** 산은 1,000억원, 기은 1,000억원, 민간 4,030억원 → 소부장 중소·중견기업 등 투자
-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동 금융지원을 통해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

IV. 향후 계획

- 관련 법령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
 - * 수은의 공급망기금 출연, 면책규정, 투자대상 확대, 조성기간 연장 등
- 민관협력 확산 위해 협력사업의 모델케이스를 발굴·확보
 - * 핵심광물투자협의회 투자사업 발굴, 대규모 사업 공동금융 지원 등

기관	프로그램명	구분	주요 내용	
공급망 안정화기금	공급망 안정화 사업자금	대출	- 공급망안정화 사업 추진 기업의 시설자금, 기술자금, 투자자금, 구매자금, 운영자금 지원	
한국 수출입은행	공급망 안정화 금융프로그램		- 자원안보, 물류네트워크, 글로벌 생산체계, K-제조기반, 공급망 위기대응 관련 기업 지원(최대 0.5%p 금리우대)	
한국 산업은행	초격차산업지원 프로그램		- 반도체, 원전, 이차전지, 바이오헬스, 디스플레이, AI 분야 기업 지원(최대 1.2%p 금리우대)	
중소 기업 은행	① 원부자재		원자재가격 부담완화 지원대출	- 원자재 가격 상승 애로 기업 지원(최대 1.3%p 금리우대)
			트러스트온 보증부대출	- 원자재 구매대금 지원(최대 1.0%p 금리우대)
			공급망 결제성여신 지원 프로그램	-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결제성 여신 지원 (최대 1.3%p 금리우대)
	② 피해 지원		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	- 수출기업 신규 설비투자 지원 (최대 1.3%p 금리우대)
			IBK 강소기업대출	-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 육성 (최대 1.0%p 금리우대)
			수출입기업 유동성 지원 자금대출	- 원자재 자금, 생산자금 등 지원 (최대 1.0%p 금리우대)
			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	-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유동성 자금 지원 (최대 1.3%p 금리우대)
	③ 대외 의존 완화		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	- 미래 핵심동력 산업 영위기업 등에게 산업환경 대응 지원 (대출한도 우대, 최대 1.3%p 금리우대)
			소부장 혁신지원대출	- 소·부·장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전, R&D자금 지원 (대출한도 우대, 최대 1.0%p 금리우대)

* 공급망안정화 목적 펀드 조성 내역

펀드명	규모	참여기관	주목적 투자분야
글로벌 공급망 대응 펀드	0.6조원	산은 1,000억원 기은 1,000억원 민간 4,030억원	① 소부장기업 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기업에 50% 이상 투자, 단 소부장 기업에 20%이상을 투자 ② 중소·중견기업에 50% 이상 투자
공급망안정화 펀드	1.8조원	공급망기금 1,000억원 수은 1,000억원 민간 16,337억원	① 경제안보품목/서비스 영위 기업에 공급망기금 및 수은 약정액의 1.5배 이상 투자 ②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공급망기금 및 수은 약정액의 1.5배 이상 투자

기관	프로그램명	구분	주요 내용
중진공	소부장 중점 융자지원	대출	- 소부장 산업을 중점지원분야로 지정하여 우대 지원 (대출한도 70억원 →100억원)
	해외 원부자재 공급망 발굴 컨설팅	컨설팅	- 해외 원부자재/대체품 공급망 발굴, 리스크관리 등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업체 컨설팅 지원
해진공	터미널·물류 분야 투자	투자	- 우리기업의 국내외 거점 물류자산 확보 지원
무역보험공사	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	보험	- 신산업(EV배터리 등), 핵심광물 개발 등에 대한 공급망 재편 대응 맞춤형 중장기 금융 지원
신용보증기금	①소재·부품·장비	보증	- 소부장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, 시설 자금 보증(보증비율 100%, 최대 0.5%p 보증료율 우대)
	②공급망경색피해기업		- 글로벌 공급망 경색에 따른 매출액과 수출입 실적이 감소한 기업 보증지원 (보증비율 90%, 최대 0.3%p 보증료율 우대)
			-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(보증비율 95%, 최대 0.3%p 보증료율 우대)
	③가격상승피해기업		- 매출액 대비 원재료·상품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 우대 보증 지원(보증비율 90%, 최대 0.3%p 보증료율 우대)
기술보증기금	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	- 소부장 산업 국산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운전, 시설자금 지원(보증비율 95%, 최대 0.4%p 보증료율 우대)	
	중소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	- 원재료 가격상승 및 공급망 불확실성 피해우려 기업 우대보증 지원(최대 0.8%p 보증료율 우대)	
KOTRA	수입처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	보조금	- 수급차질 위험도가 높은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처 다변화 희망기업 지원(대체수입처 발굴, 원료구매, 시험인증, 시운전 자금, 요소 수입단가 차액지원)
	공급망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	컨설팅	-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 필요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급망 정보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
광해광업공단	핵심광물 비축	출자	- 국가적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광물의 비축·운영 (핵심광물 비축확대, 신규기지 구축 등)
	해외자원개발조사	보조금	-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시 필요한 기술 및 정보, 자금 등 제공